

# “지명 철회” vs “낙마 안돼”… 여야, 김행 임명 힘겨루기

### 민주 “청문회 초유 후보자 행방불명, 대통령 사과·인사 철회해야 협치” 국힘, 방어막 구축 속 출구 전략 거론… 서초구청장 보선 결과 영향 촉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 일각에서는 출구 전략도 거론되고 있어, 서초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더 강하게 촉구 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

사대책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해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지명 철회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가위 소속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당시 김 후보자가 퇴장하는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남겼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정대책회의에서 “청문회장에서 줄행랑치는 김 후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뺏아서 삭제하는 존

극이 벌어졌다”며 “이것도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을 위증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윤영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변 내용이 있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대책회의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순을 보여주는 장관 후보자들을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고 있다”며 “그 책임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낙마할 이유가 없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정쟁 목적으로 지난 5일 열렸던 김 후보자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강서구청장 현장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우선 반성부터 해야 한다. 망신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내놓은 차대막 뒤에선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 김 후보자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게 아니며 임명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었다. 일부 비주류 의원은 출구론을 공개 거론했다. 재선 이용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공세를 퍼는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며 지진 사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주류 중진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할 부

처인 만큼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에 대항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여가부는 폐지할 부처이기에 장관 임명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게 맞는다. 좀 늦긴 했지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앞으로 (임명) 안 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가고 총선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주류 초선 김용 의원은 청문회 전인 지난 달 26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라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인사 판결문이란 이런 걸 봤는데 지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서초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도위 국감 자료 제출 공방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감 브리핑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을”

#### 조오섭 “군 공항 이전 사업 발목”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 총량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8.88㎢(269만평)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군 공항 이전과 함께 협재 추진중인 반도체특화단지, 의료특화단지, 에너지산업 확대 등 지역 현안사업으로 필요한 물량은 25.21㎢(762만평)으로, 최소



16.33㎢(493만평)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산단 조성 등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광주와 대구처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지역 현안 사업과 직결된다”며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지자체, 정부 ‘세수 핑크’에 역대급 재정난 우려

### 광주 3500억·전남 1조4700억 감소 전망…현안 사업 차질 불가피

올해 ‘세수 핑크’가 5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세뿐 아니라 올해 지방세 결손도 심각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역대급 재정난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각각 3500억원, 1조 4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에 이전되는 교부세

가 당초 75조3000억원에서 63조7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별로는 보통교부세가 66조6000억원에서 56조원으로 10조6000억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는 5조7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1조 원 줄어든 전망이다. 이 의원이 2022년도 각 지자체 별 교부세 배정액, 2023년도 행안부 교부세 예산액 및 기재부 발표 세수 감소액 등을 비교 분석해 각 광역지자체별(광역지자체 본청과 소속 기초지자체 교부세액 포함) 교부세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경북이 1조7637억원, 전남 1조

3684억원, 경남 1조1845억원, 강원 1조1396억원, 충남 9342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는 292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부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재정자립도 28.7%), 전북(27.9%), 강원(29.4%), 경북(29.7%)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지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 기자 cki@

## “과학기술 역량 수도권 편중 고착화 심각”

### 민형배 “지역 경쟁력 전국 하위권”

광주·전남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10일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순위 변화’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은 각각 11위, 15위에 그쳤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16.7점 ▲서울 16.0점 ▲대전 13.1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 정부는 1위인 경기지역 혁신역량 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은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2년에는 상위권인 5위에서 시작해 점차 순위가 내려가 급기야 2021년에는 13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1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위권인 12위에서 시작해 2014년, 2016년에는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후 몇 계단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도 15위에 그쳤다. /오광록 기자 kroh@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